



‘재정 지원’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입찰요건이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10(목), 경향신문 「체코, 원전 수주 협상서 ‘재정 지원’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었다」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한수원이 발주사측으로부터 받은 입찰과 관련된 정보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체코측이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했다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출장 결과보고서(3.28)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임
 - 동 출장에 동행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은 “체코측이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요건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임
- 사실과 다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생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281)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정권호	(044-203-5157)

